

“전력공급 과잉 문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전기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었던 전력공급 부족상태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었다. 통상적으로 적정한 전력설비 예비율은 15% 내외이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력설비 예비율은 16.3%로 공급과잉상태로 넘어갔다. 이러한 전력공급 과잉은 올해부터 매년 원전 1기 및 민간발전소 건설급증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력공급 과잉은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제6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9.15 대정전과 원전가동 중단이 집중돼 전력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원전건설 및 민간발전 허가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했다.

또한, 경제성장률대비 전력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률(GDP)도 실제보다 높게 예측했다. 더욱이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전력 설비용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절전대책과 수요관리 정책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크부하 대비 전력예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가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평상시의 전력예비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 예측 실패로 초래된 전력공급 과잉문제는 발전설비의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았던 발전시장에 민간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특히, LNG 발전은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소들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어 준공과 함께 정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전력공급 과잉 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먼저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는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원전의 경우 올해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호기를 비롯해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11기가 준공될 예정인데, 이들 원전의 준공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수명을 다한 원전의 경우 재가동 없는 폐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간발전의 경우 전력거래소에 의해 가동여부를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효율적인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력공급 과잉 문제는 대북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전기산업은 남북 통일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써,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은 새로운 시장이자 투자지역으로서도 큰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전력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